

【 민법총칙 】

1.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
-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- ④ 태아가 출생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,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.

2. 다음 권리 중에서 형성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추인권	ㄴ. 상계권
ㄷ. 계약해제권	ㄹ. 채권자취소권

- ① ㄱ ② ㄱ, ㄹ ③ ㄴ, ㄷ
- ④ ㄴ, ㄷ, ㄹ ⑤ ㄱ, ㄴ, ㄷ, ㄹ

3.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乙의 동의가 없으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.
- ② 乙이 甲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, 甲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.
- ③ 甲이 속임수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, 甲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甲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
4. 「민법」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자가 유언을 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.
- ②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.
- ③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출연한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,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5.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
- ⑤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6. 「민법」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.
-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.
- ③ 이사의 성명, 주소는 등기사항이다.
- ④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.
- ⑤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7.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
- ②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.
- ③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
-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하여야 한다.

8.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, 미성년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-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다.
- ④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-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9. 「민법」상 주소(住所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.
- ②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생활할 수 없으므로 주소는 한 곳만 허용된다.
- ③ 거래행위를 위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를 거주소(假住所)로 정할 수 있다.
- ④ 어떤 자에 대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居所(居所)를 주소로 본다.
- 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.

10.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계약해지
- ② 채무면제
- ③ 유언자의 유언
- ④ 상계의 의사표시
- ⑤ 취소의 의사표시

11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한 경우,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.
- ②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,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.
- ③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한 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- ④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'강박'에는 권리행사를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.
-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,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「민법」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.

12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
- ② 본인의 사망은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.
- ③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.
-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.

13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
-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, 공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14.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,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甲·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.
- ② 乙은 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甲은 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④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⑤ 만약 丁이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선의이면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15.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-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.
-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16. A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, 내심으로는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B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B가 A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여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, A는 X부동산을 B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.
- ② B가 A의 진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.
- ③ A와 B가 통정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A와 B가 통정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A가 X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였다면, A는 B에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X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A와 B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고, 이를 알지 못한 C가 B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, A는 그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C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17. 甲의 대리인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②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,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④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수 없다.
- ⑤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.

18.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「민법」 제126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「민법」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.
- ② 「민법」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,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「민법」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.
-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해야 한다.
- ④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의 법률행위에 속해야 한다.
- ⑤ 「민법」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.

19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대리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.
-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.
- ③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.
- 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
20.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.
- ②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.
-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.
-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가진다.
- ⑤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,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.

21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할 수 없다.
- ③ 중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,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.
-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,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
22. 12월 30일 15시부터 2개월이라고 할 때, 그 기간은 언제 만료하는가? (단, 다음 해 2월의 말일은 28일이며,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.)

- ① 2월 28일 15시
- ② 2월 28일 24시
- ③ 3월 1일 15시
- ④ 3월 1일 24시
- ⑤ 3월 2일 15시

23.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乙에게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- ② 甲이 추인한 경우,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③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,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,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응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24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.
-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.
- ④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.
- 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,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
25.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-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.
- ③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.
- ④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책임은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,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한다.
- ⑤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.